정수복의 '응답하는 사회학'

성매매와 사생활 침해

최근 한국 최고의 재벌 총수가 다수의 조선족 여성을 성매매한 사실을 추정케 하는 동영상이 발표되어 세간의 주목을 끌었다. 우리 사회에 성매매가 널리 이루어지고 있음은 누구라도 어렵지 않게 짐작할 수 있지만 그것이 문제가 되어 수사가 이루어지고 처벌받는 경우는 드물다. 암암리에 내밀하게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물건과 서비스를 화폐 가격으로 환산하여 사고파는 자본주의 시장의 논리를 따르자면 성적 서비스를 제공하고 그에 대한 금전적 보상을 받는 일은 자연스러운 거래 행위로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여성의 성을 상품화하여 거래하는 일은 법으로 금지되고 있다. 그런데도 성희롱과 성폭력은 금지되어야 하지만 성매매의 경우 다른 서비스와 마찬가지로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사이에 합의가 이루어지면 그만이지 누가 거기에 간섭을 하느냐는 질문이 제기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여성의 가장 오래된 직업이라고 하는 성매매를 법으로 금지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 건전한 성도덕과 성풍속을 해친다는 이유도 있지만 성매매가 금지되는 이유는 그것이 인격에 대한 훼손이기 때문이다. 인간은 누구라도 함부로 범할 수 없는 거룩한 인격을 지니고 세상에 태어난다. 인격의 존엄성은 남녀를 불문하고 인류라는 종의 차원에서 보호해야 할 숭고한 가치이다. 그것은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사회를 유지하기 위한 기본 조건이다.

사람의 몸마저 시장에서 사고파는 물건이 된다면 어떻게 될 것인가? 아프리카에서 강제로 끌려온 흑인들이 노예시장에서 거래되는 장면을 상상해 보라. 인간이 다른 인간의 몸을 상품으로 만들어 돈을 주고 거래한다면 그것은 파는 사람만이 아니라 사는 사람의 인격마저도 훼손하는 일이다.

성매매는 돈을 주고 타인의 몸을 범하는 일에 그치지 않고 그 사람 안에 들어있는 거룩한 인격을 범하면서 자신의 인격도 훼손하는 비인격적인 거래다. 자본주의 시장경제가 상품화할 수 있는 모든 것을 거래의 대상으로 만들지만 장기 매매를 금지하고 인신매매를 금지하는 이유도 그것이 인간이 갖는 성스러운 인격을 훼손하기 때문이다.

가난하고 궁핍했던 시절 '먹고 살기 위해서'라는 다급한 생존의 요구 앞에서 성매매가 이루어지기도 했다. 그러나 오늘날 생존의 문제는 복지나 보호 정책의 차원에서 정책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이지 성매매를 정당화하는 이유가 되지 못한다. 물질적 삶의 수준이 높아지고 쾌락주의적 가치관이 지배하게 된 현대사회에서 행복은 더 많은 즐거움과 동의어가 되었다. 성 해방의 물결에 따라 거의 모든 상품 광고는 성적 욕구를 암암리에 자극하고 있다. 이런 세상에서 성적 유혹에서 벗어나 인격과 인간적 품위를 지키고 산다는 일은 만만치 않은 일이다.

그러나 최소한 사회에서 중요하고 높은 자리를 차지하는 사람일수록 인간적 품위를 지키는 모습을 보여 주어야 한다. 돈은 눈앞에서의 복종은 불러일으킬 수 있지만 진정한 존경심은 자아낼 수 없다. 성매매를 일삼으며 인간적 품위를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이 사회의 상층부를 이루고 있다면 그 사회는 인격이 존중받는 사회가 될 수 없다.

이번 성매매 사건에서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점은 타인의 사생활 침해라는 문제다. 한 개인의 사적이고 내밀한 생활을 남몰래 염탐하고 동영상으로 만들어 그 자료를 무기 삼아 금품을 갈취하는 행위는 성매매와 마찬가지로 다른 사람의 인격을 훼손하는 행위이다.

공산주의 사회의 비밀경찰이나 군부독재 정권의 정보기관이 권력에 비판적인 요주의 인물의 일거수일투족을 24시간 감시한 것은 분명한 인권 침해이다. 널리 알려진 사람들의 뒤를 쫓으며 그들의 사생활을 사진에 담아 언론사에 팔아넘기는 파파라치나 특정인을 미행하며 그 사람의 비행 장면을 포착하여 금품을 요구하는 사람들 또한 심각한 인권침해 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다.

어떤 이유에서든 자신의 존재를 알리지 않고 전화, 이메일, 문자메시지, 편지 등을 통해 특정인을 괴롭히는 스토킹도 타인의 인격을 훼손하는 비열한 행위이다. 그것은 육체적 고통 못지않은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유발한다. 경찰이나 수사기관이 명백한 혐의가 있는 피의자의 일상을 미행하고 감시하는 것은 예외이다. 그렇지 않을 경우 무방비 상태에 있는 개인의 사생활 침해는 근절되어야 한다.

성매매가 쾌락주의 사회의 징후라면 사생활 침해는 정당한 경쟁과 합리적 갈등 해결 방법의 부재를 나타낸다. 정치 활동이나 기업 활동, 애정 관계나 원한 관계에서 상대방을 제거하기 위해 전문가를 고용하여 경쟁자의 뒤를 밟아 약점을 찾아내는 음모적 정보 수집 활동이 드라마가 아니라 현실에서 빈번이 일어나고 있다. 성매매와 사생활 침해의 심각성을 느낄 수 있게 하는 인격 존중의 윤리적 감수성 회복이 절실하다. 〈사회학자·작가〉

커피 한 잔

준비 못 한 해방, 준비 안 된 통일

조 경 완
호남대 신문방송학과 교수

광복절로 시작한 이번 주, 아침 커피 한 잔 하면서 한반도를 한번 생각해 보고들 넘어가자.

해방은 그야말로 '덜컥' 왔다. 감격스러웠다. 바닷물도 춤을 추었고, 모두들 흙 다시 만져 보았다. 그러나 준비 안 된 해방은 재앙이었다. 어, 어, 하는 사이 분단이 이어졌기 때문이다.

남북 분단은 여러 학자들이 동의하듯 만주 주둔 관동군에 대한 미국의 과대평가가 씨앗이었다. 미국은 태평양전쟁에서 확실한 승기를 잡았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지상군의 저항에 의해 전쟁이 장기화될 것을 우려했다. 루즈벨트와 트루먼은 스탈린에게 일본을 공격해 줄 것을 애걸했다.

독일과의 전투에서 무려 200만 명을 잃은 스탈린은 좀처럼 참전을 하지 않았다. 그러나 8월 6일 히로시마에, 이틀 뒤 나가사키에 원폭이 투하되자 스탈린은 잽싸게, 바로 그날 8월 8일 대일 선전포고를 했다. 소련군의 참전은 160만 명의 대규모였으며 이미 전의를 상실한 120만 관동군을 파죽지세로 짓밟아 하루 200㎞씩 진군할 정도였다.

참전 이틀 만인 9일에 하얼빈과 나진을, 13일에는 청진을 점령했으며 14일엔 항복을 받아냈다. 이로써 소련은 대일승전 연합국의 일원이 되었다. 참전 일주일 만에 거의 아무런 희생 없이 한반도의 절반을 점령할 수 있는 엄청난 수확을 거둔 것이다.

남북 분단은 정확히 1945년 9월 2일 이뤄졌다. 38선을 그은 사람은 미 국무성의 무관이었던 딘 러스크 대령이란 사람이다. 그는 일본의 항복이 예견되던 8월 10일 한반도 지도를 놓고 임의의 횡선을 그었는데 위도상 북위 38도와 거의 일치했다. 러스크 대령은 수도를 미국 측이 관장하는 것이 유리하다고 보고했고, 이 제안은 8월 13일 트루먼이 채택, 즉시 처칠과 스탈린·장제스에게 통보되었다.

반대자는 없었다. 트루먼은 다시 이를 '일반명령 제 1호'라는 명칭으로 태평양 연합군 최고사령관 맥아더에게 하달했고, 맥아더는 9월 2일 이를 한반도에 경비행기 삐라를 통해 포고한다. 포고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한반도에 있어서 38도선 이북의 일본군의 항복은 소련이, 이남은 미국이 접수한다." 이것이 한반도 분단의 구체적 모습이다.

이후의 대격변기에 소련은 일련의 프로그램들을 신속히 추진하여 동구에서처럼 극동에 소련의 위성국가를 만드는 데 일사불란했지만 미국은 갈팡질팡했다. 소련은 9월 초 압록강 수풍발전소 전력의 남한 공급을 끊은 데 이어 불과 며칠 사이 철도 전신 전화 우편을 차단했다. 1946년 3월에 토지개혁법, 6월에 선거법과 노동법, 7월에 남녀평등법, 8월에 산업 교통 운수 체신 은행 국유화 법을 시행했다. 소련 고문단은 이 시기 최고의 효율성을 발휘했다.

미국은 느슨했다. 역시 삐라로 뿌려진 맥아더 포고문을 보면 "남한에 군정을 실시할 것, 공공기관에 종사하는 자는 계속 근무할 것"으로 돼 있다. 일제의 연장인 것이다. 이후 미군정 3년의 혼란, 찬탁 반탁 갈등, 남한의 좌우익 유혈충돌, 단정 수립과 6·25 전쟁은 차마 말로 다 못 할 비극이었다.

이미 1943년부터 카이로회담과 테헤란 회담이 열리고 종전 후 각 식민지 국가들의 장래에 대한 논의가 시작되었으며 1945년 얄타회담·포츠담회담이 잇따라 열리는 동안에도 우리의 민족 지도자들은 해방에 대한 아무런 준비를 하지 못했다. 상해 임정에 참가하러 왔던 이승만이 양변기가 없다고 불평하며 미국으로 돌아가 버리질 않나….

준비 못 한 해방이 비극을 낳았듯, 준비 안 된 통일은 재앙이 될 것이 확실하다. 북핵이다, 대북 제재 조치다, 사드 배치다 요란한 지금이지만 동유럽 국가들이 그랬듯 갑작스러운 북한의 붕괴는 가능하다.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그 역(逆)도 성립한다.

언제부턴가 '우리의 소원은 통일'이란 노랫소리가 들리지 않는 게 남한의 현실이다. 지식인들 사이에서는 막대한 통일 비용을 고려해 통일을 유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나온다. 한반도 유사시를 대비한 한미연합사의 작계(作戰計劃. O Plan) 중 일부는 중국과의 충돌을 우려해 한반도 통일선을 청천강 라인으로 상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를 지적하는 사람은 없다. 누구도 통일을 준비하고 있지 않은 것이다.

먹고 살기 바쁜데 무슨 통일 준비냐는 핀잔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답보 상태의 남한 경제를 부흥시키는 최고의 처방은 통일이다. 준비란 게 거창할 건 없다. 우선 어느 자리에서나 통일 후의 사태를 화제로 삼고 이야기꽃을 피워야 한다. 준비 못한 재앙을 또 다시 후손에게 물려줄 수는 없는 일 아닌가.

기 고

자율적인 총장선출은 대학 발전 시금석

김 영 철
전남대 교수회장·전자컴퓨터공학부 교수

최근 국·공립대학 총장선출 및 임용과정에서 드러난 교육부의 정책에 대해 사회와 정치권의 비난이 거세지고 있다. 그런데 교육부는 이렇다 할 설명이나 해결방안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 교육부는 정부의 '창조경제' 모토를 실천하기 위해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고 대학이 창의적 교수·학습의 장이 되도록 지원해야 한다.

그럼에도 교육부는 대학현장 경험이 전무한 행정관료의 교육정책에 휘둘려 대학을 성과와 능률만을 추구하는 고등 취업기관으로 전락시키고 있다. 이에 따라 야당 국회의원들은 교육정책 집행기관을 교육부가 아닌 교육자문위원회로 대체하자는 법안을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 발의하는 데 이르렀다.

이명박 정부 이래로 교육부는 국·공립대 선진화 방안 정책을 시행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교육공무원법이 보장하는 총장 직선제를 학칙으로 채택한 대학에 편법적으로 행정·재정적 불이득을 가하고 있다. 대학입학 정원수의 감소와 교육부의 등록금 동결 정책으로 매년 재정 상태가 어려워진 대학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교육부의 압력에 굴복하여 총장 간선제를 시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총장 직선제 시행 이후 줄곧 유지되던 총장후보 1순위자의 총장임용 관행이 지켜지지 않고, 심지어 간선제를 통해 추천된 총장 후보자마저도 정당한 사유 없이 장기간 임용하지 않으며 총장공백상태를 방치하고 있다.

교육부의 이러한 일관성 없는 정책으로 대학 내부의 갈등이 증폭되고 총장공백사태가 장기화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 국·공립대학의 현실이다. 국민 대부분은 최근 대학 총장선출과 관련된 논란을 단순히 총장을 어떻게 뽑느냐의 문제로 이해하고 있다.

그런데 근본적인 문제는 사회 민주화와 대학 민주화의 결실인 총장 직선제가 대학의 자율성을 보장하는 '대학 거버넌스'의 핵심 요소이기 때문에 총장 직선제를 지지, 회복코자 하는 대학구성원과 이를 저지하여 대학을 정부의 지도 감독하에 두려는 교육부간의 갈등에서 기인한다.

전남대는 거점국립대 최초로 지난 1988년 총장 직선제를 실시하여 2012년까지 총장 직선제를 시행했지만 2012년 교육부의 행정·재정적 압박에 굴복하여 학칙을 간선제로 개정한 이후 타 국·공립대학처럼 부작용을 경험하고 있다.

즉 간선제 총·학장제도를 통해 일방적인 대학 지배체제를 확보한 교육부는 총장에게 무소불위의 인사권과 행정권한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다. 이에 따라 간선제로 선출된 총장의 대부분이 과거 직선제 총장과는 달리 대학구성원과의 민주적 소통에 소홀하고 무소불위의 인사와 공채 전횡을 휘두르는 등 폐해를 일으키고 있다.

이처럼 총장 간선제는 대학 내 갈등을 심화시키고 대학 발전을 위협하는 요소가 되고 있다.

그나마 다행으로 전남대는 전국에서 처음으로 총장과 교수회가 합의하여 차기 총장선출안을 대학구성원 투표를 통해 결정하기로 하였다.

교수회장의 단식 및 이에 대한 전국 국공립대학교 교수회연합회와 학생회의 지지·격려가 총장의 양보를 이끌어내기도 했는데, 결과적으로 대학구성원 투표는 대학의 자율성 회복을 위한 진전을 보였다고 평가할 수 있다.

향후 전남대에서 실시할 대학구성원 투표에서 총장선출안이 확정되면 총장과 평의원회는 대학구성원의 민의를 존중하고 차기총장선출 과정을 차질 없이 진행해야 할 것이다.

만약 전남대가 직선제안을 채택하더라도 교육부는 대학에 제재를 가하는 편협한 태도를 취할 것이 아니라 대학이 자율적 운영을 통해 21세기 창의적 융합형 인재를 양성하는 요람으로 거듭나도록 지원해야 할 것이다.

5·18민주화운동과 6·10항쟁으로 쟁취한 대학 민주주의를 수호하기 위해 노력하는 전남대와 조선대에 관심과 격려를 보내주시길 광주·전남 지역민께 바란다.

社 說

지역 현안 정부예산 확보 끝까지 총력을

광주시와 전남도의 내년 예산 확보에 적신호가 켜졌다. 지역의 숙원 과제나 신규 사업의 예산들이 줄줄이 삭감되거나 누락된 것이다.

전남도의 경우 2017년도 철도, 도로, 항만 등 기반시설 설치 등을 위해 정부부처에 요청한 사업비 가운데 절반이 누락돼 기획재정부로 넘어갔다. 광주시 역시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 등 주요사업이 부처 예산에 포함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국회에서의 예산 반영 및 증액이 없을 경우 신규 사업뿐만이 아니라 기존 사업도 차질이 불가피해 대책 마련이 절실한 상황이다.

16일 전남도에 따르면 전남도가 건의한 236건 2조6823억 원 가운데 기재부가 심의 중인 정부부처 예산안에 반영된 건수와 액수는 127건에 1조3697억 원(반영률 51%)에 불과했다. 법령 등에 의한 국가 일괄 배분 예산 및 지역발전특별회계(시·군, 시·도 자율 편성분) 등이 제외됐지만, 반영 건수와 액수가 지나치게 적다는 지적이다.

광주시의 경우 내년에 253건 2조1390억 원의 국고 지원을 건의한 상태이지만 215건 1조7842억 원이 반영됐다. 주요 미반영 사업은 무등산 정상 군부대 이전(50억 원), 광주～순천 간 경전선 전철화(48억 원), 빛그린 산단(광주방면) 진입도로 개설(19억 원), 자동차 애프터마켓 부품 시험인증센터 구축(30억 원) 등이다.

이 같은 정부 예산 삭감은 여·야의 잇따른 호남 구애와 정치권의 호남 출신 약진 등 모처럼 훈훈해진 분위기에 찬물을 끼얹는 일이 아닐 수 없다. 국회는 여·야를 막론하고 오는 19일까지 계속되는 기재부의 예산 심의 과정에 미반영 예산이 반드시 포함되도록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 필요할 경우 '조선·해운업 구조조정 청문회'(23일)와 추경경정예산 처리(22일)를 연계해 예산을 관철시키는 전략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서서히 가시화되는 '광주형 일자리' 모델

오늘 광주시와 금호타이어 노사가 '광주형 일자리' 모델 정착을 위한 협약을 맺는다고 한다. 지방자치단체와 기업의 노사가 협력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로 공생의 토대를 만들기 위해 손을 맞잡게 된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는 지역공동체가 경제 활성화를 위해 동참하는 것으로 그동안 많은 논란과 함께 성사 여부가 큰 관심이었다. 핵심 개념은 근로자에게 적정한 임금을 줘 인건비를 줄임으로써 기업의 투자를 늘려 더 많은 사람에게 일자리를 주는 데 있다.

예컨대 근로자 연봉이 억대 가까이로 치솟으면 기업은 부담이 커져 고용을 줄일 수밖에 없다. 이를 감안, 임금을 상식선으로 적정하게 낮추는 데 근로자가 동의하면 여유를 갖게 된 기업은 투자 확대로 더 많은 사람이 취업할 수 있는 선순환이 가능하다. 광주시는 지난달 이 구상을 이끌 컨트롤 타워로 '더 나은 일자리위원회'를 출범시켰고 이번에 마침내 첫 성과물이 나온 것이다.

협약 참여자들은 상호 존중과 협력을 바탕으로 한 노사문화 조성을 위해 함께 노력하게 된다. 노사 상생 프로그램과 각종 노동정책 현장교육,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도 따르게 된다. 한마디로 지자체와 지역 기업의 노사가 상대방 입장을 충분히 수용하고 '공존'을 위해 만드는 독특한 기업문화로 우리나라 제조업의 위기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시도로 주목받고 있다.

이 같은 맥락에서 협약이 첫걸음을 떼게 된 것은 의미가 크다 하겠다. 광주시가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친환경 자동차 클러스터 사업'도 이 모델이 뿌리내리면 투자 유치가 훨씬 수월해져 성공 가능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광주형 일자리 모델은 지역의 미래를 위해 꼭 필요한 요건이라 하겠다. 그런 만큼 조속하게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사는 서로 배려하고 자치단체는 적극 지원하는 등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

無 等 鼓

끝나지 않은 이야기

'아리랑 고개를 넘어간다.'

이빨이 다 빠진 할머니가 '아리랑' 한 대목을 부르며 웃음을 터트리다 쑥스러운 듯 미소 짓는다. 할머니는 '우리 아가들이 사는 세상에는 그런 무서운 전쟁과 나쁜 짓이 없어야 한다'는 말을 남겼다. 광주여성재단 '마르지 않는 눈물 : 나비의 꿈'전에서 만난 '위안부' 공정엽 할머니 모습은 오래 기억에 남는다. 할머니는 전시가 진행중이던 5월 16일 96세로 세상을 떠났다.

이어지는 애니메이션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는 사랑스러운 한 소녀가 등장하며 시작한다. 좋아하는 동네 오빠를 보고 얼굴이 붉어지는 소녀의 삶은 '위안부'가 되면서 나락으로 떨어지고 만다.

애니메이션은 고(故) 김학순 할머니의 증언으로 제작됐다. 할머니는 1991년 8월 14일 전 세계에서 최초로 '그 때'를 증언했고 이듬해 1월 8일 일본대사관 앞 '수요집회'가 시작됐다. 할머니의 증언에 용기를 낸 발언이 전 세계에서 터져나왔고 2012년 대만 '일본군 '위안부' 문제해결을 위한 아시아연대회의'는 8월 14일을 '세계 일본군 위안부 기림일'로 지정했다.

어제 열린 수요집회는 1224회째였다. '화해와 치유 재단'에 반대하는 할머니들은 "일본이 위로금 형식으로 주는 돈을 받기로 한 것은 위안부 할머니들을 팔아넘긴 것밖에 안 된다"고 말했다.

최근 출간된 김숨의 소설 '한명'은 세월이 흘러 생존 '위안부' 피해자가 단 한명만 남은 어느 날을 배경으로 한다. "신에게 소원을 빈다면 그녀는 하나만 빌 것이다. 고향 마을 강가로 자신을 데려다 달라고, 열 세살 그때로." 소설 속 할머니의 소망이 가슴 아프다.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 중 한 대목도 울컥한다. 2006년 미국 증언 집회에서 미국 여대생이 질문한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나왔나요?" 할머니가 답한다. "나의 증언을 경청해 주는 여러분들의 반응이 나를 당당하게 해줍니다."

역사를 바꾸는 용기는 단 한 명의 용기로부터 시작됐고, 계속된 용기들로 인해 우리는 진실 앞에 서게 됐는지도 모른다.

전시는 오는 9월 20일까지 계속된다. 유투브에서도 볼 수 있으니 '아직 끝나지 않은 이야기'를 꼭 찾아보기 바란다. /김미은 문화1부장 mekim@

光州日報 The Kwangju Ilbo

사장·발행·편집·인쇄인 金汝松 주필 李洪載 편집국장 程厚植

1952년 4월 20일 創社 1980년 11월 29일 등록번호 광주가1(일간) | 우) 61482 광주광역시 동구 금남로 238

대표전화 222-8111·220-0551〈지사·지국(구독신청·배달안내)〉 광고문의 062-227-9600

편집국안내		경 제 부	220-0663
〈대표 FAX	222-4918〉		〈FAX 222-4938〉
편 집 부	220-0649	문 화 부	220-0661
정 치 부	220-0632	문화미디어부	220-0664
사 회 부	220-0642	체 육 부	220-0697
사 회 2부	220-0652	사 진 부	220-0693

경영지원국	220-0515	문화사업국	220-0541
	〈FAX 222-8005〉		〈FAX 222-0195〉
기획관리국	227-9600	독자서비스국	220-0551
	〈FAX 227-9500〉		〈FAX 222-0195〉
디 자 인 실	220-0536	서 울 지 사	02-773-9331
			〈FAX 02-773-9335〉

※구독료 월정 10,000원 1부 500원

본지는 신문윤리 강령 및 그 실천요강을 준수합니다